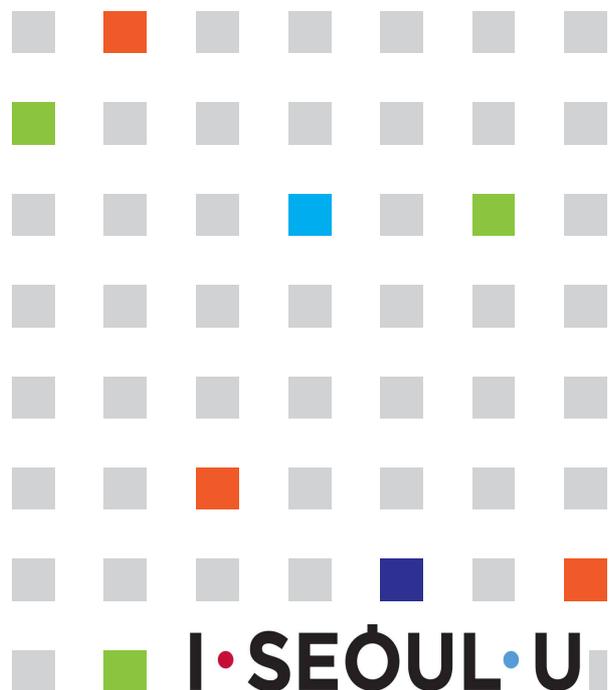


· 긴급점검 ·

유럽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사회정책



연구진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안기덕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정현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오문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경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이형미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주임

■ 글 심는 순서

1	긴급점검의 배경	4
2	스웨덴의 COVID-19 대응 사회정책	7
3	독일의 COVID-19 대응 사회정책	13
4	영국의 COVID-19 대응 사회정책	19
5	이탈리아의 COVID-19 대응 사회정책	23
6	스페인의 COVID-19 대응 사회정책	28
7	유럽의 대응 적용 방안	31

1 긴급점검의 배경

□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세계경제의 위기 예측

- WHO 사무총장은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가 세계적인 유행임을 알리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함. 이 질병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각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치료, 완화, 예방 정책과 함께, 이 질병에 대한 새로운 상황을 습득하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혁신과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표함¹⁾.
- 국제노동기구(ILO)²⁾는 3월 18일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최소 530만명에서 2,47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을 공개함. 전 세계 GDP 성장률이 2%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서는 530만개, 4%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선 1,300만개, 8%가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선 2,470만개로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함.
- IMF 총재와 OECD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그 충격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 코로나-19 팬데믹 발표 후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감염증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이동중단, 지역 봉쇄, 직장폐쇄 등의 강력한 국가적 조치들로 인해 수출의 중단, 지역사회 소비중단 등의 위협으로 각국의 국내외 경제적 위험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임.

□ 각국 정부가 앞 다투어 경기부양책과 사회정책을 내 놓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재난기본수당이 제기되는 등 정책이 활발히 논의됨.

1) WHO(2020), WHO 사무총장 COVID-19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2020년 3월 12일)
<https://www.who.int/dg/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ission-briefing-on-covid-19---12-march-2020>

2) <https://www.ilo.org/global/topics/coronavirus/news/lang--en/nextRow--20/index.htm>

- 각국들은 긴급하고 단계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양적 완화와 기금 조성, 국가 대출 보증 등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음.
- 세계은행(World-Bank)은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예방 프로그램이 확대 추세라고 언급하며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과 상병수당, 사회보장과 실업급여를 보완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다양한 정책을 소개³⁾함.
- 현 시기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적극적 국가의 기능과 사회정책의 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사회보험제도로 산업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스웨덴,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들이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바, 각국의 정책을 검토하여 국내(서울시)의 적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됨. 각 국가별로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시함.

- 개관
 - 인구, 노인 인구 비율, 집권당, 4월 9일 현재 COVID-19현황, 관련 주요 정책 기조를 제시함.
- 기업에 대한 지원
 -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세금 등 사회부담 유예, 대출)
 - 신용지원, 임대료 지원, 기타 경기부양책들
- 노동자 보호 조치
 - 해고금지(유예) 조치, 근무시간 감축 운영을 위한 기업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지원
 - 개인별 직접 수당, 사회보험 부담금 유예 등
- 상병수당 정책

3) World Bank 2020. 3.20. Social Protection and Jobs Responses to COVID-19

- 아플 때 사회보험과 수당을 통한 조치들

○ 국가별 특징적 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취업훈련, 일자리 창출, 기타 정책적 특성)
-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돌봄 서비스 및 바우처 등

2 스웨덴의 COVID-19 대응 사회정책⁴⁾

□ 개관

- 인구수 : 10,099,265명
- 노인수 : 2,028,538명 (인구수 대비 20.1%)
- 집권당 : 사회민주노동당(총리)+녹색당 연합
- COVID-19 현황(4. 9. 현재) : 확진자 8,419명, 사망자 687명, 완치자 205명

○ 스웨덴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위기전환을 위한 패키지를 각각 내놓고 있음. 스웨덴의 모든 정책들은 집권당 및 자유당과 중앙당의 협약체결로 수행됨.

(1) 중소기업 위기대책 패키지

- 스웨덴 재무부⁵⁾는 COVID-19의 확산은 세계적인 비상사태며 스웨덴과 전세계의 경제적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발표하며 경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함. 경제적 효과를 완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내용임(스웨덴 재무부 보도자료 3.11).

(2) 일자리 및 위기전환 패키지

- 스웨덴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및 위기전환 패키지와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⁶⁾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 등을 다양하게 제시함. 스웨덴은 기존의 실업보험 제도와 일자리 훈련 제도를 통해 구직과 재취업훈련에 지원되는 모든 급여와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자격을 완화하고 연장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음.

4) Word Bank(2020) Global review of social Responses to COVID19
<https://www.thelocal.se/20200311/sweden-changes-sick-pay-rules-to-help-fight-coronavirus>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the-public-health-agency-of-sweden/>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0/03/crisis-package-for-jobs-and-transition/>

5) <https://tillvaxtverket.se/english/short-time-work-allowance.html>

6)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0/03/crisis-package-for-jobs-and-transition/>

[표 1] 스웨덴 일자리 및 위기전환 패키지 예산 규모

사업 내용	예산액(스웨덴 SEK)	예산액(한국 KRW)
실업 보험의 일시적 강화	53억 3000만 크로나	6,555억 3,670만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25억 8000만 크로나	3,173억 1,420만원
고등교육기관의 원격교육 강화	7억 1천만 크로나	873억 2,290만원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 확대	11억9000만 크로나	1,463억 5,810만원
학자금 원조 소득 한도제 폐지	10억 크로나	1,229억 9,000만원
총 액	108억 1000만 크로나	1조 3,293억 570원

○ 기업에 대한 지원

(1)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 취지: 중앙정부의 지급 보증으로 중소기업 대출 원활하도록 지원 : 기업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급보증을 실시함.
- 대상: COVID-19 바이러스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견고하지 않은 기업
- 내용: 신규 은행 대출의 70%를 지급 보증함. 보증은 은행에 발급되어 회사에 보증된 대출을 제공함. 스웨덴 국세청(Swedish National Debt Office)은 보증을 관리하며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각 회사는 최대 7,500만 크로나(92억 5,125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 기업은 정부의 보증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 기간 : 사업 수행은 발표 다음날부터 실시함. 종료 기간을 정하지 않음.

(2)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 및 개인 부담금 일시 감축

- 내용 :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일시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노령연금 부담금만 지급하도록 함. 최대 30명의 직원과 한 달에 25,000 크로나(308만 3,750원)이하 직원 임금 부분에 적용하도록 해야 함.
- 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취약 부문의 임대료 한시적 할인

- 대상 : 내구 소비재, 호텔, 식당, 기타 특정 활동 등의 취약부문
- 내용 : 취약부문 세입자에 대한 고정임대료를 줄이는 임대업자들은 임대료 감면액의 일부를 보정받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임대업자 보상은 고정임대료 감소분의 최대 50%가 되며, 이 보상금액은 감면되기 전 원래의 고정임대료의 최대 25%가 되도록 함. 관련 보상은 카운티의 행정위원회에 신청하며 정부는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 중앙정부가 고정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50억 크로나(6,135억원)를 할당함.
- 기간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노동자 보호 조치

(1) 단기정리해고(Short-term layoffs),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확대

- 내용 : 코로나 19로 일시적 재정난에 시달리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며 상황이 개선 될 때 신속하게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단시간 노동 지원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든 비용의 많은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제도임⁷⁾. 중앙정부가 근무 시간을 줄이는 직원 비용의 3/4를 부담하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1/4를 부담하는 방식임.
- 대상 : 예견할 수 없었던 일시적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고용주
- 기간 : 기한을 특정하지 않음. 새로운 규칙은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3월 16일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함.
- 재정 : 스웨덴의 경제 및 지역 성장국은 2020년에 24억 2천만 크로나(2,969억 3,400만원)를 배정하여 지원함. 2000만 크로나(24억 5,400만원)를 스웨덴 경제 지역 성장국에 투입하여 필요한 시스템 지원 및 지원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사용하고 향후 연간 800만 크로나(9억 8,160만원)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함.

7) <https://tillvaxtverket.se/english/short-time-work-allowance.html>

(2) 실업보험 한시적 강화 및 심사일 없이 즉각 지급

- 내용 : 실업률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실업보험기금 지급대상 선정 대상 요건에서 고용기간과 실업보험 납부 기간 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안함. 실업보험 금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모두 일시적으로 올려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도록 제안함.
- 변화 : 초기 6일의 적격심사일자를 없애고 실업보험기금을 먼저 행정 자금에서 받는 방안을 추진함.

○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지원

(1)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 대상 : COVID-19 발생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개인사업자
- 내용 :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용 유보금 규칙을 변경함. 변경한 규칙에서는 2019년 과세 소득의 100%를 최고 100만 크로나(1억 2,312만원)까지 세금용 유보금 기준으로 함. 개인 사업자는 5월 부가 가치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음.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임. 이 정책으로 유동성을 70억 크로나(8,661억 1,000만원)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봄.
- 기간 :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2) 문화와 스포츠에 10억(1,227억원) 크로나 투자하여 개인적으로 지급

- 취지 : 문화 부문과 스포츠, 운동은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해당분야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새로 10억 크로나(1,227억원)의 추가지원을 함. 문화 분야의 보조금 할당기관과 스웨덴 스포츠 연합(Swedish Sports Confederation)에 의해 분배됨.
- 내용 : 문화기금 5억 크로나(613억 5천만원)는 공공모임이 제한되어 수익을 잃은 활동에 부여됨. 문화 분야의 배우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스포츠 자금 5천만 크로나(61억 3,500만원)는 수익을 잃은 활동 영역에 부여됨. 돈은 주요 챔피언십, 레크레이션 레이스 또는 엘리트 스포츠 경기와 스포츠 행사 조직 또는 협회에 지원됨.

○ 상병수당 정책

(1) 상병수당 지급 유예기간 폐지

- 내용 :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카렌스 다그'(상병수당 보장일 제도-통상적으로 아픈 둘째날부터 보장)를 폐지함. 스웨덴의 사회보장부는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려면 아픈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아픈 첫날에 개인을 돕기 위해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임”이라고 발표함. 스웨덴 법은 통상적으로 상병수당을 질병일의 두 번째 날부터 보장했으나, 노동자가 아픈 첫날 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일하러 가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만든 정책임.
- 방법 : 노동자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결근하는 첫날부터 병가를 내고, 고용주가 아닌 정부가 질병일 첫날 급여비용을 부담함. 첫날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소급 적용됨.
- 기간 : 이 제도는 3월 11일부터 1개월 반 동안 시행됨.

○ 스웨덴의 특징적 정책

(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⁸⁾

- 스웨덴의 공공 고용서비스기관(Arbetsförmedlingen, The Swedish Public Employment Service)은 구직과 실직을 등록하고 교육훈련과 수당신청 및 구직활동 등록 등을 수행하는 기구임. 이 기관은 새로운 직업 입문 과정, 채용 추천 기간을 현재 기간보다 1년 더 연장하고 창업지원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훈련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기존 수당과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자연과 산림 보존 분야 고용확대 기금을 통해 지자체가 청년을 위한 여름 일자리로 녹색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

(2) 고등교육기관 취·창업 훈련 원격 훈련 강화

8) <https://www.government.se/articles/2020/03/economic-measures-in-response-to-COVID-19/>

-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창업 훈련의 2020년 여름강좌 및 추가 의료인력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실시할 때, 고등교육기관에 원격학습을 위한 인터넷 기반 교육(MOOCs,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을 개발 운영하도록 무료로 기금을 지원함.

(3) 직업교육 및 훈련 기회 확대

- 지역 직업 성인 교육에 대한 기금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잉여금 등 기금을 직업교육에 지출하도록 지원함. 직업고등교육은 단기코스, 새로운 직업 영역 개발 뿐 만 아니라 현장실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련 연구기관과 협회에게 권고함.

(4) 학자금 원조 소득 한도제 폐지

- 학자금 원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한도를 일시적으로 없앴. 스웨덴의 학자금 정책은 성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약 210억 크로나(2조 5,552억원)를 지출하며, 이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일부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48만 2천명에 해당함.

(5) 증상자와 70세이상자 외에는 면역강화를 위한 운동 권장

- 스웨덴 공공보건청은 COVID-19로 인한 고위험군을 증상이 있는 사람들과 70세 이상 인구로 봄. 70세 이상 인구는 가능하면 집에 있고 대인간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하고 있음. 그 외의 인구집단은 개인간의 접촉을 줄이고 바람을 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알리고 있음. 공공보건부는 스포츠와 운동을 계속할 것을 권장함.
- 신체 활동은 스웨덴의 공중보건 기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이에 체육관, 수영장, 스포츠 홀은 그대로 개방하고 지역 스포츠클럽의 경기와 훈련 등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발표함. 스포츠 활동 규칙을 협회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정함. 접촉을 줄이는 훈련을 하고, 혼잡하지 않게 하며, 침이 전달되는 물병과 구강보호대 등은 공유하지 않도록 조치함(3.27./3.30.) 단, 스웨덴 경찰은 50명이상 모이는 집합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함(2020.3.30).

3 독일의 COVID-19 대응 사회정책 9)

□ 개관

- 인구수 : 83,783,942명
- 노인수 : 17,709,700명 (인구수 대비 21.1%)
- 집권당 : 사회민주당+기민당·기사당 연합
- COVID 19 현황(4. 9. 현재) : 확진자 113,296명, 사망자 2,349명, 완치자 46,300명

○ 독일 정부는 COVID-19 대응을 위해 단계별(1~3단계) 긴급조치를 발표

- 1단계 : 단축근무자 수당 및 기존 프로그램 운영

- ① 소기업 및 자영업자 경제보조금, 대출금 형태 지원(400억유로, 53조 원), ② 위기 기업에 노동자 급여 지원으로 정리해고 방지, ③ 예술 쪽 종사 프리랜서 대출 제한 완화, ④ 경제적 어려움 예술인, 음악인 경제보조금(최대 2천유로, 270만원)

- 2단계 : 유동성 지원 및 세금 유예

- ① 기업 유동성 확보용 지원 패키지로 보증과 세금유예, ② 독일 경제 펀드 부활시켜 기업 위기 극복 지원 대출 보증프로그램, ③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지불 유예

- 3단계 :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에 대한 과세 개선, 법인세 절감 등의 경기부양책 추진", "2021~2024년 매년 31억 유로(4조 2천억 원)씩 연방정부의 투자를 강화하되, 도로·교통과 주택 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을 추가 반영

□ 기업에 대한 지원

- 독일 경제펀드(Wirtschaftsfonds Deutschland)의 재추진을 검토하고

9) <http://news.kotra.or.kr>; <https://www.berlin.de>; <https://www.manager-magazin.de/>; www.berlinreport.com; 등에서 검색된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있음. 이는 2009~2010년 시행된 독일 정부의 경기부양패키지 II의 조치 중 하나로 기업이 금융위기에 따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독일재건은행(KfW) 은행의 특별 프로그램 150억 유로(약 20조 2천억 원)와 함께 총 1150억 유로(약 150조 8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음.

-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 기업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기업지원 패키지는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보증과 세금 유예’가 특징적임.
 - 독일 정부는 이미 피해를 본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기업이 일시적으로 폐쇄를 해야 할 경우에 유동성 지원이 시행되며, 구체적인 사안은 재계 및 노조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할 방침임.
 - 독일 정부는 광범위한 기업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지불을 유예시키고자 함.
- 독일재건은행(KfW)의 특수 프로그램 외에도 알트마이어 장관은 협의 전 개선된 감가상각 조건,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에 대한 과세 개선, 법인세 절감 등의 경기부양책 추진을 검토 중
 - 독일 정부는 우선적으로 기업세금 경감 조치에도 합의하고 디지털 경제 상품에 대한 공제 가능성을 개선하기로 함. 단,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찾기 위해 정부 및 산학 간 의견 교환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던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는 향후 법인과 같이 과세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지불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됨. 현재까지는 특히 이익 잉여금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정으로 과세 측면에서 법인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됨. 동시에 인적회사는 관대한 공제 규정을 통해 영업세에 대한 세금 부담이 경감되고 있음.
 - 더 나아가 해외에 입지를 갖고 있는 다수의 기업에 몇 개월 공방 속에 지연된 해외과세를 연말까지 국제 최소 과세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적절하게 경감시킬 예정임.

- 현재까지 해외에서 25% 이하로 과세된 경우 독일 내에서 추가 과세 대상으로 적용되었는데, 과세 지표가 15%로 낮아질 경우 재계에서는 다수의 증빙 의무가 완화되는 등과 같이 기업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음.
- 현재 세금 경감을 위한 예산 총 50억 유로(6조 7천억 원)가 아직 완전히 소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더 많은 세금 경감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외에도 독일 연정은 수십억 유로 규모의 추가 투자 패키지 도입에도 합의함. 2024년까지 총 124억 유로(약 16조 7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새로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함. 이로써 2021~2024년 매년 31억 유로(4조 2천억 원)씩 연방정부의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특히 도로·교통과 주택 건설에 소요될 예정
- 더 나아가 향후 10년간 총 1400억 유로(188조 6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정부 투자를 강화해 나가는 데도 합의함.

□ 노동자 보호 조치

- 단축근무자 수당은 원칙 12개월, 최대 24개월에 한해 노동시장의 특이한 사유로 일상적인 근로시간이 감축할 시,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임금(60%)을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임. 한 명 이상의 양육 자녀가 있는 경우 67%까지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정부 보호조치로 인해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 경기요인에 의한 단축근무 수당이 있는데, 이는 침체 상황의 가능성 또는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이미 여러 차례 위기 시 검증된 바 있음.
- 단축근무자 수당(Kurzarbeitergeld)은 원칙적으로 12개월, 최대 24개월에 한해 노동시장의 특이한 사유로 기업 내 일상적인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근로 감축 시 고용인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일연방노동청의 지원 하에 상실된 고용인원의 순 임금의 60% 또는 67%(최소 자녀 1명인 경우)를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임.

- 독일 내각은 3월 11일(수)에 2020년 말까지 단축근무 규정 확장을 주 골자로 하는 '내일의 일자리법(Arbeit-von-morgen-Gesetz)'이 의회 통과 절차를 신속하게 거치도록 하여 4월 초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로써 고용주는 현행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근로시간 감축(미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보장금을 완전히 공제받을 수 있음.
- 단축근무 수당이 지급될 경우 현재까지 기업의 약 30%가 미근로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독일 연정은 이를 최대 10%까지 낮추고자 함.
- 지원은 실업보험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독일연방노동청은 현재 단축근무 지원을 위해 약 2억5,500만 유로(약 3,434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음. 추경 1,500억 유로(약 200조 원) 중 400억 유로(53조 원)은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 보조금 및 대출금 형태로 지원될 계획임.
- 단기 실업 상태로 전환된 근로자를 위해, 기간 제한 없는 실업 수당 지원도 논의 중

□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지원

- 위기의 기업에 노동자 급여를 지원해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를 막는 방안을 도입하고, 거의 모든 주의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등이 폐쇄됨에 따라, 예술 쪽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을 위해 대출 제한을 완화시키는 방안 추진 예정임.
- 각 도시 opera theater에 등록된 음악가들,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시 소속이므로 현재 theater가 문을 닫아도 급여는 보장됨. 예를 들어 NRW주의 경우는 뮤직솔레, 공연 등의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음악인들에 한해 경제적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함(최대 2000유로까지, 270만 원).
- 베를린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위기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즉시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음.
- 독일 베를린에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즉시지원금이 신청 3일 만에 바로 지급함.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베를린에서만 총 9억 유로(약 1조 2123억 원)가 풀림(대다수가 문화예술인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 향후 3개월치 운영자금 명목으로 직원 5명 이하 사업자에 5천 유로(678만원), 직원 6명~10명 이하 사업자에게는 1만5천 유로(2,036만원)를 기본적으로 지급함. 직원 5명 이하 사업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다시 최대 9000유로(1,222만원)를 더 신청 가능함.
- 베를린시는 3월 27일 금요일 12시부터 베를린투자은행(Investitions Bank Berlin, IBB)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즉시지원금을 신청 받음. 해당 정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함.
-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신청서 작성 소요시간 약 10분 정도로 매우 간단함.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예', '아니오'로 확인, 직원 수, 인적 사항과 주소, 세금번호와 회사정보, 신분증, 그리고 계좌번호를 입력
- '현금 즉시 지원'은 직원이 최대 10명까지인 사업자들만 받을 수 있음. 더 큰 규모의 회사는 특별 대출, 신용 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음 달 방값과 각종 세금, 대출이자 등을 부담해야 하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두고 서류를 하나하나 체크하며 소득을 따지고 상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선 지급하고, 추후에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함.
- 지원 등급은 직원 0~5명까지 사업자와 5~10명까지 사업자로 단순히 두 분류로만 구분함. 등급을 나누고 지원금에 차등을 둘수록 그만큼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급 액수에 차등을 두거나, 희망 지급액을 받지 않고 일단 '넉넉히' 일괄 지급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베를린시는 "필요한 금액보다 남은 액수는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후속 확인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지원금은 소득으로 잡혀 향후 세금 납부 대상이 됨.
- 코로나19 즉시 지원금은 '독일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베를린에서 세금 번호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것임.

□ 상병수당 정책

- 독일의 상병수당 정책은 COVID-19 이전부터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왔으며, 이 기준에 의해 준용됨.
- 사용자 부담 상병수당 :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사용주가 이전 근로소득 보장을 법률화(강제화)
 - 독일의 경우, 자격조건은 4주 근로관계이며, 급여수준은 이전 소득의 100%, 급여 기간은 6주
 -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근로자의 소득 손실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의 역할만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사용자 또한 이에 대한 일정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상병수당 지급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설정하는데, 독일의 경우 대기기간이 없고 급여지급 기간은 3년 동안 78주임.
 - 급여수준 : 이전 평균소득(세전 소득)의 70%(세후 액수의 90% 초과 불가)
 - 자격기준 :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소득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경우
 - 재원: 사회보험방식(건강보험료)이며, 노동자와 고용주가 반반씩 부담(7.45%씩 총 14.9% 기여)하고 연간 상한액은 4만 5천 유로(약 6천만 원)
 - 관리감독기관 : 건강보험 보험자(질병금고)
 - 78주가 지난 경우에는 장애연금(Erwerbsminderungsrente) 수령 가능
 - 아이들이 아픈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부모에게 상병수당이 지급됨(10~25일 간의 상병수당 지급)

4 영국의 COVID-19 대응 사회정책¹⁰⁾

□ 개관

- 인구수 : 67,886,011명
- 노인수 : 12,092,100명 (인구수 대비 17.8%)
- 집권당 : 보수당
- COVID-19 현황(4. 9. 현재) : 확진자 60,733명, 사망자 7,097명, 완치자 135명
- 영국 수상은 지난 3월 17일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지원 보증 대출의 전례가 없는 일괄 안을 발표함. 최초 3,300억 파운드(490조)의 보증을 제공함. 이는 GD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임. 영국 정부는 코로나 19 법안에 새로운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함.

19

□ 기업에 대한 지원

(1) 세금감면

- 보육시설(nurseries)을 포함한 몇몇 사업체는, 2020년 4월 1일부터 1년 동안 ‘사업세 지불 유예(Business Rates holiday)’ 자격이 주어짐.
- 사업세(Business Rates bill)에 대한 소매 할인(retail discount)을 적용받고 있다면, 10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음.
- 사업체가 51,000파운드(7,600만원) 규모 또는 그 이상의 소매 부문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또는 레저 및 접객업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사업세(business rates bill) 10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다음 해까지 10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음.

1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pport-for-those-affected-by-covid-19>의 내용을 기초로 정리함.

(2) 현금성 지원

- 사업체가 소상공인 요금감면 혜택 또는 농촌지역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일회성의 10,000파운드(1,500만원) 현금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김.
- 사업체가 소매업, 접객업 또는 여가산업 분야이면, 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김. 15,000파운드(2,250만원)이하의 과세 표준액(rateable value)을 가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1만 파운드(1,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김. 14,999파운드와 51,000파운드(2,250만원~7,660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25,000파운드(3,760만원)의 현금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김.

(3) 대출지원

-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 조치를 실행함.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출금의 80%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 최고 500만파운드(76억원)의 대출금을 최초 6개월간 무이자로 지원함.
-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대응 조치 실행: 단기채무 완화를 위해 영국 은행이 '기업어음(commercial paper)'을 매입함.

□ 노동자 보호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제도(Job Retention Scheme)'¹¹⁾
 - '임시 휴무(on furlough)'에 대해 고용주와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고용주는 정규 임금의 80%를 고용유지 제도를 통해 지불 할 수 있으며, 최대 월 2,500파운드(380만원)까지 지불함. 최소 3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청구할 수 있음. 3월 1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기한은 연장될 수도 있음.
 - 월수입 계산방법: 1년 만근자는 작년 동일 월 소득 또는 작년 월평

11)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could-be-covered-by-the-coronavirus-job-retention-scheme>

균 소득 중 선택 가능, 1년 미만자는 월평균 소득으로 함.

- 실직한 경우: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¹²⁾ 또는 ESA (New Style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¹³⁾를 신청함. 만약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지원 대기 중에 생계가 어렵다면, 선금을 요청할 수 있음.

□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지원

- 자영업자 소득 지원 제도 (Self-Employed Income Support Scheme)¹⁴⁾
 - 이 제도는 2018~19년 거래이익 5만 파운드(7,520만원)이하 또는 2016~17년, 2017~18년, 2018~19년 평균 거래이익 5만 파운드(7,52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해당함. 또한 이 기간 소득의 절반 이상이 자영업에서 나와야 함.
 - 최소 3개월 동안 한 달 최고 2,500파운드(380만원) 받을 수 있음. 지난 3년 동안 평균 월 거래 이익의 80%에 해당하는 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자영업자는 배관공, 전기 기술자, 음악가, 미용사 등임.
- 자영업자의 세금납부 어려움에 따른 대응: 사례별 대응을 위한 콜센터 운영함. 개별 상황과 부채에 따라 조정됨.
- 음식점(펍, 레스토랑)의 테이크아웃(take out)서비스 임시 허용

21

□ 상병수당 정책

- 상병수당(Statutory Sick Pay) 대상자가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다면, 주당 94.25파운드(14만원)를 받을 수 있음. 최대 28주 동안 고용

12) 유니버설크레딧(universal credit)은 근로연령층(16세~64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부조 제도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은 것임(노대명·이현주외, 2014,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영국과 일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 장애인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임. 영국 정부는 2008년 ESA(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도입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을 조건부화함(김경환, 2018, “영국 복지의 조건부 경향과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vol7, pp.115~120.).

14)<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gives-support-to-millions-of-self-employed-individuals>

- 주가 지불함. 자가격리자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보호자도 포함함.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또는 자가 격리 권고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질병 기록지(sick note) 제출이 필요 없음. NHS 111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 원칙은 결국 4일째부터 지급이나, 하루부터 지급으로 변경함.
 - 자영업자이거나 주당 118파운드(17만원) 이하 소득자일 경우(상병수당 대상자가 아닌 경우),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이나 ESA (New Style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를 보다 쉽게 청구할 수 있음. ESA (New Style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는 8일이 아닌 1일부터 병가로 지급함.
 - 만일 자영업자이며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을 받는다면, 최저 소득 요건이 일시적으로 완화됨. 한편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을 청구해야 하지만 코로나 감염자거나 자가 격리 중인 경우, 고용센터(Jobcentre Plus)에 가지 않고도, 선금(advance payment)을 청구할 수 있음.
 - 중소기업(small- or medium-sized business, 250명 미만의 직원 고용)을 운영하는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주간(자가격리 기간)의 상병수당(SSP)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영국의 특징적 정책

-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개인에 대한 별도 지원: 지방정부(Local Authority)를 통해, 5억 파운드(7,473억) 규모의 재난기금(Hardship Fund) 운용할 계획임.
- 재정적 어려움으로 대출(주택 담보대출 포함) 상환, 월세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부는 최소 3개월의 상환 및 납입 유예(rental holiday)를 보장함. 또한 최소 3개월 동안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음.
- 신용카드 대금 납입 유예(rental holiday)와 관련해 협의 가능함.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5 이탈리아의 COVID-19 대응 사회정책

□ 개관

- 인구수 : 60,461,826명
- 노인수 : 13,644,400명 (인구수 대비 22.6%)
- 집권당 : 민주당
- COVID-19 현황(4. 9.현재) : 확진자 139,422명, 사망자 17,669명, 완치자 26,491명

- 이탈리아 정부는 COVID-19 대응을 위해 250억 유로(약 33조 72억 원, GDP의 1.4%)의 긴급 재정을 투입함.¹⁵⁾
 - 보건의료체계 및 국민 건강 보호 32억 유로(약 4조 2,958억 원)
 - 지자체의 세금 징수 연기 및 공공 납부기한 연기 등 기타 기업 지원액 64억 유로(약 8조 4,476억 원)
 - 실직자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보존과 소득 지원액 103억 유로(약 13조 6,403억 원)
 - 기업 및 가정 경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용 공급 지원 조치 51억 유로 (6조 7,539억 원)

23

□ 기업 지원책¹⁶⁾

(1) 대출 지원

- 투자 유치 및 사업 개발을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대출한 기업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반년 단위로 연장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은 분할 상환 가능함.
- 중소기업 대출 상환은 9월 말까지 6개월 간 정지하며, 특히 Invitalia

15) IMF(2020.4.2)<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

16) OECD(2020. 3. 31) <http://www.oecd.org/coronavirus/en/>

- (주정부 투자진흥청)에서 대출한 금액의 상환을 1년간 정지함.
-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무료 보증 펀드 기금을 17억 유로(약 2조 2,495억 원) 인상함. 중소기업기금의 최대 보증액은 250만 유로(약 33억 원)에서 500만 유로(약 66억 원)로 상향 조정됨.
 - 중견 기업들이 대출할 경우 주정부는 최대 100억 유로(약 13조 2,324억 원)를 보증함.

(2) 세제 혜택

- 상업용 임대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 공제하며, 이연법인세 자산(DTA)을 금융 및 산업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로 전환하여 손상 차입금(NPL) 판매 인센티브를 제공함.
- 연간 매출액이 200만 유로(약 26억 원)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0년 3월에 예정된 모든 세금 및 사회 보장 비용에 대한 징수가 정지됨.
-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지자체는 전기, 가스, 수도, 폐기물 요금 등에 관한 징수를 2달(3월, 4월)간 중지함.

(3) 임금 보충제도 강화¹⁷⁾

- 임금 보충제도에 참여한 기업에게 3개월 이내의 일반급여액 지원함.
- 고용 규모에 따라 회사별 지원금 상한선에 차이가 있으며, 재정 출처는 고용보험기금(고용 및 훈련을 위한 사회기금)임.
- 임금 보충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에게도 해당 기금을 통한 지원책 검토 중임.

(4) 기타 지원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5억 유로(약 6,597억 원)임.
- 기업의 직장 내 위생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예산으로 총 5천만 유로(약 661억 원)를 편성함.

17) <http://www.protezionecivile.gov.it/amministrazione-trasparente/provvedimenti/-/content-view/view/1221838>

□ 노동자 보호 조치¹⁸⁾

(1) 보육 및 돌봄 지원¹⁹⁾

-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2020년 3월 5일 이후부터 최대 15일 동안 유급육아휴직(임금의 50%를 주정부가 보전)이 가능함. 단, 부모가 동일한 날짜에 동시사용은 불가함.
-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하지 않을 경우, 600유로(약 80만 원) 상당의 보육 바우처를 지급함. 보건의료 및 법률 분야에서 근무하는 부모에게는 최대 1000유로(약 132만 원) 지원함.
- 장애가 있는 가족 또는 친인척을 돌보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는 12일로 연장하며, 이를 위하여 50억 유로(약 6조 6,162억 원)를 투입함.

(2) 현금 지원 및 임금 보전

- 연간 소득 4만 유로(약 5,370만원)이하의 근로자에게 2020년 3월에 한하여 현금 100유로(약 13만 원)를 1회 지급함.²⁰⁾
- 2018년 과세연도 소득 3만5천유로(약 4,700만 원)미만 또는 연소득 3만5천유로(약 4,700만 원)이상~5만유로(약 6,700만 원)이하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하청업체 근로자 등에게 3월 한 달 동안 600유로(약 80만 원)를 지급함.²¹⁾
- 위기 상황 동안 회사로부터 근로활동의 제한을 받게 된 피고용자는 2020년 8월 이전 9주 분 임금의 80%를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음.

(3) 대출 지원

- 시민기본소득(Reddito di Cittadinanza, 이하 RdC) 대상자에게 두 달

18) <http://www.protezionecivile.gov.it/amministrazione-trasparente/provvedimenti/-/content-view/view/1221838>

19) <https://www.time24.news/i/2020/03/italian-government-proposes-vouchers-for-babysitters-and-payment-of-80-of-wages-in-response-to-coronavirus-3-15-2020-world.html>

20) Word Bank(2020) Global review of social Responses to COVID19
<https://www.thelocal.se/20200311/sweden-changes-sick-pay-rules-to-help-fight-coronavirus>

21) 이탈리아 노동 및 사회정책부 홈페이지 www.lavoro.gov.it

간 용자조건(conditionality)을 유예하고, RdC 사용처를 온라인 구매까지 확대함.

- 실직근로자 부동산 담보 대출 상황 1년 정지를 위하여 4억 유로(약 5,292억 원) 투입함.

(4) 고용 보장

- 60일간(3월17일~5월16일) 해고 및 구조조정 금지에 관한 중앙정부 행정 명령(The Cura Italia decree)이 실행됨.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지원²²⁾²³⁾

- 지자체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매월 500 유로(약 6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함.
- 직원을 두지 않고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2020년 5월 31일까지 40만 유로(약 5억3,695만 원)미만까지 원천 징수세를 적용하지 않음.

26

□ 상병수당²⁴⁾

- 코로나 격리로 인한 유급 병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1.3억 유로(약 1,720억 원)를 투입함.

□ 이탈리아의 특징적 정책²⁵⁾

- 시민보호청 홈페이지에 COVID-19 질병 현황, 행동 수칙, 긴급조치, 영역별 (이동, 노동, 운송, 교육, 관광, 공무원, 장애인, 상업 활동, 생산 활동, 농업, 사회서비스, 회의, 운동, 조치 위반 시 대응 등) FAQ, 기금 모금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그림 1 참고).

22) OECD(2020. 3. 31) <http://www.oecd.org/coronavirus/en/>

23) World Bank(2020). Global review of social Responses to COVID19
<https://www.thelocal.se/20200311/sweden-changes-sick-pay-rules-to-help-fight-coronavirus>

24) <http://www.protezionecivile.gov.it/amministrazione-trasparente/provvedimenti/-/content-view/view/1221838>

25) 이탈리아 시민보호청 홈페이지 <http://www.protezionecivile.gov.it/home>

- 생필품 판매 외에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 중임에도, 취약계층 대상의 필수 사회서비스(영양, 위생, 치료 등; 여가서비스 제외)는 대인 간 안전거리(1미터)를 유지하며 제공되고 있음.

[그림- 1] 이탈리아 COVID-19 포털(영어 버전)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for the Italian Civil Protection Department's COVID-19 emergency response. The main banner prominently displays the 'CORONAVIRUS EMERGENCY' logo and a specific donation account number: IT84 2030 6905 0201 0000 0066 387. The website is organized into several functional sections: a left-hand navigation menu for 'CORONAVIRUS' including emergency management,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maps; a central 'Press Releases' section with the latest updates on positive cases as of April 6, 2020; a 'Public Notices and Announcements' section detailing procedures for service provision and market consultations; and a 'Legal Measures' section listing urgent interventions. The top of the page includes the official logo and social media links.

6 스페인의 COVID-19 대응 사회정책

□ 개관

- 인구수 : 46,754,778명
- 노인수 : 8,959,500명 (인구수 대비 19.2%)
- 집권당 : 사회주의노동자당
- COVID-19 현황(4. 9. 현재) : 확진자 148,220명, 사망자 14,792명, 완치자 48,021명

□ 기업에 대한 지원²⁶⁾

- 1,000억 유로(134조 5,040억 원)의 국가지급보증 형태의 신용 지원
- 스페인금융공사(ICO)의 저금리 융자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0억 유로(13조 4,504억 원) 예산 추가
- 중소 수출기업 대상 20억 유로(2조 6,906억 8,000만 원) 규모의 수출보험 지원
- EU 투자자들의 스페인 전략기업에 대한 헐값 인수 방지를 위한 해외 직접투자 법안 수정
 - 에너지, 교통, 안보, 공중보건 등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 원칙 제한
- 중소기업의 재택근무를 위한 디지털화 프로젝트 및 R&D 계획 지원

□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지원²⁷⁾

- 코로나 19 사태 발생 전 분기 대비 매출이 7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금 마련

26)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763>

27)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763>

- 예산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서비스 관련 지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방침 완화

□ 노동자 보호 조치²⁸⁾

- 근로시간 단축, 휴직 또는 재택근무 확대 등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
- 임시고용구조조정(ERTE)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해고 인력 최소화
 - 기존 사회안전보장세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인원 모두에 실업급여를 보장하며, 해당 사태로 인한 수급은 근로자 수급기록에 미반영
 - 이 제도 적용 기간 고용주 부담 사회안전보장세 납부 면제(50인 이하 사업장, 그 이상 기업은 25% 납부)
 - 자영업자에게는 영업활동 정지에 따른 실업급여지급 또는 사회안전보장세 납부 면제

ERTE 제도: 경영난 발생 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기간 임시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함.

□ 스페인의 특징적 정책²⁹⁾³⁰⁾³¹⁾

- 취약가계에 전기, 가스, 수도 등 필수 공익서비스 지속 사용 보장
 - 에너지 소매가격 동결(가스, 전기)
 - 고지서 미납 시에도 서비스 이용 보장(가스, 수도)
 - 전기세 할인 기간 연장
 - 식수 배달서비스 지속 보장
- 소득감소 가계만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상환 유예, 연체에 따른 강제퇴거 금지
- 광역자치주를 통해 노령층, 심신미약자 특별 돌봄지원자금 6억 유로

28)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763>

29) World Bank(2020). Global review of social Responses to COVID19, <https://www.boe.es/boe/dias/2020/03/13/pdfs/BOE-A-2020-3580.pdf>

30) http://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6930

3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763>

(8,069억 4천만원) 투입

- 전면 휴교한 아이들의 영양섭취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들에게 2,500만 유로(332억 8천만원) 지원
- 노숙인들을 위해 사회봉사를 통해 제공되는 위생 꾸러미, 음식, 음료수, 예방대책 정보 등 지원
- 「국가경계령」 기간 중 장례비용 인상 금지, 모든 장례의식 금지, 매장·화장 진행 시 유가족 최대 3인까지 참여 가능

< 스페인의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³²⁾ 이행조치 주요 내용 >

4.11(토) 24시까지 연장

- 내무부가 지방정부 경찰을 포함한 모든 경찰 및 군병력 등을 지휘
-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만 통행 가능
 - 생필품·의약품 구매, 병원·은행 업무, 출퇴근, 노약자 지원,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외출만 가능
 - 장애인, 노약자 외에는 혼자만(individualmente) 통행 가능(차량 및 도보 이동 모두 적용)
- 사회적 기본 서비스 제공 등의 필수 업종 외 근로자들의 출퇴근 전면 금지, 동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경계령 종료 후 추가 근무 가능(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지속), 위반할 때 벌금 600~30,000유로(79만 4,694원~3,972만 1,800원).
 - 사회적 기본 서비스는 식료품 등 필수재 생산 및 유통,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물자 생산, 치안·국방·청소·우편·통신·언론 등에 해당
- 모든 교육기관 휴교
- 모든 상점 운영 금지(생필품·의약품 판매점, 주유소, 세탁소, 미용실 등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만 운영)
- 모든 요식업종 운영 금지(배달서비스 가능)
-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여가시설 운영 금지
- 종교의식, 결혼식, 장례식은 참석자 수 제한하여 진행
- 보건부가 지방정부 인력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공립·사립·군 병원 등) 및 병원 자산을 관리
- 교통부가 전국 도로·철도를 통제하며, 국내 육·해상·철도 운영을 50% 감축(화물 운송은 100% 운행)
- 모든 행정절차 중단(「국가경계령」해제일을 기점으로 기한 등 일수 재계산)

32) http://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6930

7 유럽의 대응 적용 방안

□ 자영업자 및 개인 전문 사업자 지원과 적용

- 질병, 실업으로 인한 사회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 안정된 유럽 국가이더라도 자영업자와 전문사업자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음. 주로 직접적 수당과 간접적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제도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적극 도입이 검토되어야 함.

● 자영업자 및 개인 전문사업자 소득 지원 제도 도입 제안

1. 자영업자 수당으로 월 일정액 지급 적용 검토 가능

- 전문직, 자영업자, 강사, 기술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한 정책

[각국의 직접 지원 사례]

- 영국: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Self-Employed Income Support Scheme) 최소 3개월 보조금지원. 자영업자는 배관공, 전기기술자, 음악가, 미용사 등을 말함(지원금 매월 최대 2,500파운드, 380만원 지원).
- 이탈리아: 소상공인/프리랜서 지원책으로 자영업자 수당(매월 500유로, 최대 3개월 동안 67만원) 지급, 50만 유로(5억 4천만)미만의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5월 31일까지 유예
- 독일 : 각 도시 opera theater에 등록된 음악가들,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시 소속이므로 현재 theater가 문을 닫아도 급여는 보장됨. 예를 들어 NRW 주의 경우는 뮤직솔레, 공연 등의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음악인들에 한해 경제적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함 (개인당 최대 2000유로까지, 270만원).
- 독일 베를린 : 코로나19 위기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즉시지원금' 제공. 신청 3일 만에 바로 지급. 향후 3개월치 운영자금 명목) 직원 5명 이하 사업자에 5000유로(678만원), 직원 6명~10명 이하 사업자에게는 1만5000유로(2036만원)를 기본적으로 지급. 직원 5명 이하 사업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다시 최대 9000유로(1222만원)를 더 신청 가능함.
- 스웨덴 : 문화 스포츠계 종사자 수당 지급(10억 크로나, 1,227억원), 각급 관련 협회를 통해 분배하도록 함.

2.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공공인프라(전기, 가스, 수도 등) 이 요금 무료 적용 검토 가능

[각국의 사례]

이탈리아, 스페인: 자영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도, 전기, 가스 등 모든 공
과금 무료(이탈리아 4월 30일까지)

3.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개인 신용 유예제도 도입 검토 가능

- 개인 대출 납부와 신용카드납부 중단조치 적용 및 대출금 납입 유예
제도 도입 가능
-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대출 또는 채무 변제 의무 유예(신용카
드, 주택 담보 대출 등)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
- 국내에서도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
저금리 대출 및 신용보증 등을 제시하고 있음.

[신용유예제도 사례]

- 영국 : 개인에게 적용하는 영국의 대출, 신용카드 요금 납부 중단 :재정적 어려
움으로 대출(주택 담보대출 포함) 상환, 월세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 정부는 최소 3개월의 상환 및 납입 중단(rental holiday) 보장
- 독일 : 추경 1,500억 유로(약 200조원) 중 400억 유로(53조 원)은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 보조금 및 대출금 형태로 지원될 계획

□ 노동자 보호조치와 적용

- 해고 금지 및 시간 단축 근로 지원과 실업 보험 급여 지급 기준 완화 조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개인에게 현금성 지원을 실행하기도 함.

● 해고노동자 지원 및 고용 유지·노동자 보호조치 도입 제안

- 국내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나 적절한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야하며 유럽국가들의 조치와 비교하여 해고금지, 실업급여 간소화 즉시 지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노동자 지원 사례]

- 이탈리아는 60일(3월~5월 중순)간 해고 및 구조조정 금지 조치
- 이탈리아의 현금 지원 및 임금 보전 : 연소득 4만 유로(5,37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일회성 현금 100유로 지급, 연소득 5만 유로(6,7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및 근로자에게 3월 600유로(80만원) 지급, 실직 시 2020년 8월 이전 9주 분 임금의 80% 지원
- 노동자 해고 대신 근무시간 축소에 대한 임금 지원금 지급
- 스웨덴(정부가 3/4 제공), 영국(정규임금의 80% 보장, 월 최대 2,500파운드(380만원)), 독일의 단축근무자 수당제도의 사회보험금을 완전히 공제하는 예산 확보(5,500만 유로)
- 스웨덴의 실업보험급여 적격 심사일(6일간) 폐지 즉각 지급
-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직 또는 이직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간 연장으로 수당 지급, 녹색일자리 사업 추진

1. 고용유지 노동자 보호조치의 기준 완화 필요

- 국내에서는 현재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등의 정책을 제시하여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 정책대상이 저소득 구직 촉진, 저소득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소득기준을 부여함.
- 고용노동부의 정책대상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져 실업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코로나19로 인한 해고문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한계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일괄 지원하고 만일, 고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

[국내 사례 : 코로나19 고용유지 정책]

- 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함.
-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4,964억원을 투입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지원 범위에 차등을 두며, 저소득 노동자 고용유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5인 미만 기업은 노동자 1명당 월18만원 지급.
- 508억원 재정을 투입해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함. 전국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함.
- 코로나19로 경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의 근로자 계속 고용 및 유급휴업을 장려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휴업 및 휴직 수당의 일부(1일 5만6천원, 연간 최대 180일)를 지급함³³⁾.

2. 실업수당 조기 집행 및 구직활동 완화 조치 실행

- 실업급여 대상 노동자 실업급여 신속집행 (신청 후 대기 없이 집행)
- 구직활동 보고 기간 유예(일정 기간 동안)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코로나 19 기간(2월~4월)간 해고된 노동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포함하여 특별 실업수당 제도 운영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보건, 환경 일자리 훈련, 수당 확대

- 공공 보건 일자리 및 환경 일자리 개발과 훈련실시 및 훈련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함.
- 교육 훈련을 통한 수당 인정과 서울시 뉴딜일자리 최대량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증대를 위한 기금을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스웨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33) 한국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참조.

□ 가정 내 돌봄 역할 강화에 따른 돌봄 수당(바우처) 적용

● 가정 돌봄 수당(바우처) 지급 가능성 검토

- 현금성 지원은 국내에서 다각도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각지대에 대해 긴급하게 지원하는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 중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가족 돌봄 수당 지급 제안함.
- 영유, 초 중 고등학교의 휴업 및 온라인 수업, 어르신의 야외 활동 불가로 인한 여가와 돌봄 공백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가족 돌봄 수당을 지급함.
- 돌봄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완적이고 지원이 될 수 있음. 자녀 또는 고령의 가족을 둔 모든 가정에 일정액 지원금 제공
- 이탈리아 가족 돌봄 수당(바우처)의 국내 적용 가능성 및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이탈리아의 보육, 돌봄 바우처 지급 사례]

- 보육바우처(Cura Italia):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경우, 600유로(80만원) 상당의 보육 바우처 지급함.
- 보건의료 분야 및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부모에게는 최대 1000유로(134만원) 지원함.

□ 상병수당(Sickness benefit) 등 지원과 적용

- COVID-19 발생으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유럽 각국은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제도를 활용함. 급여 보전과 사회보험금 납부 유예 등 사회 보험료 일시감축(중단)을 바탕으로 해당 제도를 통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함.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제도 도입 제안

[상병 수당 사례]

- 스웨덴 상병수당 신속처리: 유예 1일 기준 없애고 아프면 즉각 수당 대상
- 영국 상병 급여(SSP) 및 수당(ESA) : 자가 격리자 및 자가격리 보호자에게 지급 (결근 1일째부터 바로 지급), 중소기업은 직원 1인당 2주간 상병급여 보상
- 독일의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지급 관련 대기기간이 없다는 특성이 있음. 독일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대기기간이 없으며, 급여지급기간은 3년 동안 78주임.
- 개인 사회보험료 유예: 스웨덴 일시감축, 이탈리아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료 징수 일시중지(4월 30일까지)

36

- 국내에서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 되어왔음. 현재 약 60%인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를 통한 기본 서비스의 확대가 급선무이므로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으며, 서울시의 유급병가 사업 등을 통해 근래 제도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³⁴⁾.
- 국내에서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치료 기간에 따른 생활비 지급이 실시되었음. 해고 걱정 없이 자가격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임. 아파도 일하는 한국의 노동 문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과 고용보장이 필요함.
- 유럽 국가별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제도의 재원, 수당 범위, 운영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며, 국내 도입을 위한 비교 연구와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입법이 요구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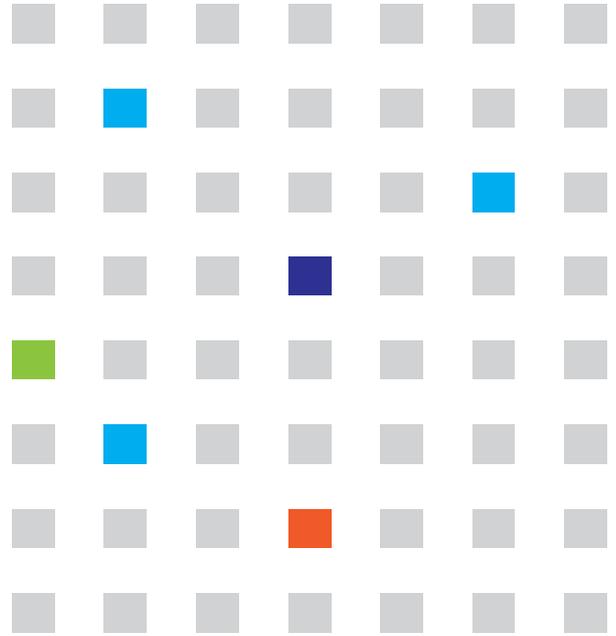
34) 정현우 외(2019) 한국 상병수당제도 및 전달체계 설계연구: 주요 선진국과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 기업 지원과 적용

-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사회보험 기업과 직원부담금 유예 및 연기 조치가 주를 이룸. 조사된 전체 국가에서 시행함.
-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은 고(高)부담 고(高)복지의 정책 기조아래, 사회보험을 유지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기업과 개인의 일상적 부담액이 높음. COVID-19라는 위기상황 속에 한시적 기여 유예 또는 중단 조치를 통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고 있음.
- 유동성 확보를 위한 독일의 경제펀드 부활사례는 경제위기에 활용한 정책으로서 기업대출과 보증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정책임.
-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 제도는 스웨덴(70%)과 영국(80%)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임대료 감면 및 무상지원을 위한 고정임대요금 감면제도 실시를 위한 각국 정부의 지원책 참고가 필요함.

● 대출 완화, 자원 다각화, 단계별 지원정책 필요

-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실시할 수 있는 정책으로 부가가치세, 사회보험부담금유예 등이 있음.
-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의 기업대출 지원이 추진됨. 유럽을 참고하여 대출의 기준과 조건을 재검토될 필요 있음. 위기 상황 이전 발생한 대출 및 신용 등급과는 별개로 기업 대상 긴급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국가의 지급 보증 책임 등에 대한 방법 모색이 필요함.
- 정부의 재정투입이 높아지는 시기이며 현 상황이 중장기화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필요한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자원 마련 검토가 요구됨.
- 긴급 자금 마련과 정책 기준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광범위하게 연대하고 있음. 비상적인 정치 상황 이후에도 연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시복지재단 2020-3
긴급점검·유럽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사회정책

발행일 : 2020년 4월 10일
발행처 : 서울시복지재단
발행인 : 홍영준
편집인 : 류명석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전 화 : 02-1670-5755

팩 스 : 02-6353-0221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ISBN : 978-89-6298-632-7(PDF)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